



신바람 난 '용전 들노래' 광주지역 대표적 농요인 '용전 들노래'를 부르고 있다. '용전 들노래'는 농군들의 피로를 덜고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 모판 밭기,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장원질 등 5개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흥겹고 경쾌한 장단이 특징이다.

150만명 규모 광복절 '생계형 사면' 대상은

### 농·어민, 자영업자 구제 초점 음주운전 초범자 대부분 포함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제20차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150만명을 특별사면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무부의 사면 준비작업이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구제적으로 특사의 범위와 기준을 밝히지 않았고 법무부 역시 아직 실무작업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자영업자, 서민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사면을) 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정부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돼 생계에 지장을 받는 운전자들을 특사를 통해 구제해 왔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에 552만명, 참여정부 때인 2005년 8월에 422만명 규모의 특사가 이뤄졌다. 생계형 범죄자의 대규모 사면에는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경제를 되살린다는 의미가 항상 부여됐다.

현 정부도 출범 100일을 기념해 지난해 6월 282만여명에 이르는 생계형 운전자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등의 혜택을 줬다.

경찰청은 특별사면과 관련해 현재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와 행정처분 직전의 벌금 누적자 통계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2개월 전 서민층 특사를 언급했을 때는 '생계형 직업 운전자'라는 용어를 썼다가 이번엔 '생계형 운전자'라고 다소 다른 표현을 한 것은 사면 범위를 넓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회 음주

운전이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이의 면허 재취득을 위한 잔여 결격기간을 삭감해 주는 방안이 유력시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람 중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가 지나치게 교통사범에 한정됐다는 여론에 따라 사면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통사범 이외에도 생계를 유지할 목적이 분명한 농·어민이 농약관리법, 어업육성법, 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식품위생법을 어겨 벌금형이나 영업정지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이번 특사에서 구제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법무부는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특사가 상습적인 교통 범죄자의 '모럴 해저드'를 키운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특사 대상을 세밀하게 선정한 방침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취소 사유를 불분하고 특사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이 때문에 나온다.

한편, 부패 정치인이나 경제사범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사 대상이 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 성적위주 대입제도 대수술 예고

李대통령 임기내 입학사정관제 완전 실현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말쯤이면 대학 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 또는 농어촌 지역균형선발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교육 대책을 언급하면서 "공교육만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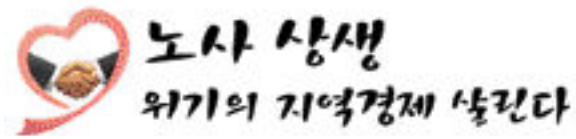
이어 "제 임기 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관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서 대학입시 개혁, 특히 입학사정관제 확대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언급해 온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임기 말까지'라는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대학입시 개혁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향후 3~4년 이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등과 같은 성적 위주의 현행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대통령과 교육당국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대입제도 개혁 의지에 적극적인 동감하면서도 '임기 내 100%'라는 구상은 오히려 입시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단기간에 선발 비율을 확대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교과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들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선발 비율을 늘리지 않도록 오히려 '양적 확대'와 관련된 부분을 평가 지표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 5 지역·대기업 생존의 길

## 싸움으로 아무 것도 못 얻는다

도요타와 폭스바겐, BMW 등은 오늘날 노사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올 1분기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선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 1990년대 경영 위기에 직면,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해야 했다. 3년 연속 적자, 93년 10억 유로의 영업 이익 적자를 기록한 뒤 나온 당시 경영 합리화 방안은 종업원 12만명 중 5만명 감축,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핵폭탄급 수준, 노조는 그러나 파업 대신,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소득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안(주간 36시간→28.8시간)을 수용, 연간 약 12%의 소득 감소를 받아들였다. 사측은 연간 16억 마르크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유연성 등 생산 효율이 향상하자 2004년 6개월 10만3천명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BMW도 지난 1959년 재정적 위기에 봉착, 메르세데스 벤츠에 합병당할

### 도요타·BMW 등 노사결속 위기 돌파 "기아차·금호타이어 고통 분담 나서야"

상황에서 대주주가 개인 재산을 털어 주식을 사자, 노조도 전폭적 협조를 하는 등 노사가 'BMW 회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일본 경제의 비뚤목인 도요타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노사 평화를 가장 잘 실천하는 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회사는 종업원의 종신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는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하는 수평적·협력적 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사간에는 '싸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지난 1950년 직원들의 임금줄 수 없을 정도로 경영난을 겪는 과정에서 1천500여명이 해고되는 참담하고 값비

싼 수업료를 내고난 뒤다. 이후부터 일본 도요타는 전 직원이 합심해 생산성 향상에 온힘을 기울였다.

이들 사례는 '상생의 노사 관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노사간 극단적 대립과 불신이 가져오는 파업은 명분도 관계없이 기업 성장을 더디게 하는 악재다. 기아차는 19년째 파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생산 손실과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유무형의 손해가 엄청났다. 금호타이어도 지난 8년간 126일동안의 파업으로 2천여원이 넘는 손실이 났다.

때문에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등이 파업을 자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광주전남 경영자총협회도 "현 시점은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며 "파업을 철폐하고 기업의 생존과 고용안정,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고 민혜 주구 비한다"고 했다.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 평균 점유율은 31.1%로, 전년도 27.4%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광주공장에서 만든 쏘울의 수출 증가로, 해외에서 세계 일류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금호타이어도 한-EU FTA 타격을 계기로 대유럽 수출 비중(20%)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사가 결속해 시장 공략을 강화하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을 맞고 있는 것이다. <끝>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